

제7장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위원 회의 개최

I 자문위원단 구성

1 필요성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아직도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위원회나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변경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 관련 규정

자문위원단 구성의 근거는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에 있다. 위원회는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양형기준 설정이나 변경 시 자문위원에게 의견을 요청하여 자문의견서를 제출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양형위원회·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II 자문위원 위촉 경과

양형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2011. 9. 16. 제36차 회의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문위원 위촉계획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내용에 따라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중에서

13인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였고, 2012. 1. 9.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III 자문위원 현황

자문위원단은 I.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자문위원 현황은 제1부 제2장 ‘양형위원회의 구성’ 부분(29쪽)을 참조하면 된다.

IV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양형위원회의 요청으로 양형위원회 제1차 자문위원 회의는 2012. 4. 2.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전체 자문위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자문위원단은 양형위원회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2 회의내용

제1차 자문위원 회의의 주된 내용은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범죄의 확정된 양형기준안 내용 및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방향에 대한 설명 등 양형위원회 현안에 대한 보고와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 6차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었다. 양형위원회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문위원단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다양한 자문의견을 냈다.

3 자문의견

가. 현안에 대한 의견

(1) 증권·금융범죄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부분

증권·금융범죄 유형에 포함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를 양형기준안과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위원단에서는 양자 사이에 죄질 차이는 인정되나, 양형기준안이 제시하는 형량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죄질의 차이를 반영하여 선고형을 달리하는 것으로 충분하여 양형기준안이 타당하다는 자문의견을 내었다.

(2) 지식재산권범죄 중 이른바 ‘비실시주체’의 권리침해 부분

이른바 ‘비실시주체(NPE, Non Practicing Entity)’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양형기준안과 같이 이를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 보아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위원단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는 일종의 ‘화이트칼라’ 범죄로서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 개인인 권리자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기술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등이 기술을 탈취·사용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 공표행위’ 부분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위원단에서는 과거 대선, 총선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으로 인하여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엄중한 처벌 요한다는 의견과 허위사실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후보자 명예가 다소 훼손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감수해야 하므로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단하여 선거 결과 좌우함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나. 기타 의견

기타의견으로는 양형기준의 용어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순화해야 한다는 의견, 양형기준을 지나치게 도식화함은 부적절하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과거의 양형실태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규범적 조정을 거쳐 형량범위를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V 향후 계획

자문위원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연 2 ~ 3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양형위원회 제2차 자문위원 회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2. 7. ~ 8.경 개최될 예정이고, 2012년도 양형위원회 제3차 자문위원 회의는 조세, 방화,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2. 11. ~ 12.경 개최될 예정이다.



| 자문위원단 구성(2012. 1. 9.) |



| 2012년도 양형위원회 제1차 자문위원 회의(2012. 4. 2.) |

제8장

양형기준 및 양형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I 설문조사 실시

1 실시 개요

가. 설문조사의 필요성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을 양형위원회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의 설정’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서 ‘기존 양형기준의 적절한 수정’, ‘거시적인 양형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양형기준 시행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향후 양형기준의 설정·수정 작업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2009. 7. 1. 양형기준을 최초로 시행한지 약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시행 후 일반인 또는 전문가들의 양형위원회 또는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나 양형에 관한 인식 변화 등에 관한 여론 조사 후 그 결과를 향후 양형기준 설정·변경 작업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양형기준 및 양형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 시행 경과

2011. 9. 16. 개최된 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과거 2007년 “양형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 사례를 참조하여 설문조사의 목적, 대상, 조사방법, 설문문의 주요내용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계획의 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 조사 대상

가. 일반인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000명을 잠정적인 표본수로 설정하되, 사회인구 통계 비율에 따라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도시와 농어촌 등으로 표본수를 안배하였다.

나. 형사사법 관련 실무가, 전문가

형사사법 관련 실무가, 전문가로는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를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초 비교그룹에서 경찰, 교도관,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법조출입 기자를 넣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경찰, 교도관,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법조출입 기자는 배제되었다.

3 설문 내용

-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인식, 신뢰도 등
- ▶ 양형기준 시행 전·후 불합리한 양형편차 감소 여부
- ▶ 양형의 적정성 개선 여부
- ▶ 현행 양형위원회 운영 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
- ▶ 현행 양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향후 양형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범죄유형에 관한 의견
- ▶ 기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 등

4 조사 방법

가. 일반인

일반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중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나. 전문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법관의 경우 대법원 코트넷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검사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변호사, 형법학교수의 경우 해당 협회의 협조 등을 통해 확보한 이메일 주소로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회신을 보내온 응답자 수는 총 908명이며, 각 직업별 구체적인 응답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전 체		908
직업별	법관	467
	검사	129
	변호사	236
	형법학 교수	76

5 조사 일정

기 간	내 용	비 고
2011. 9. 16.	● '설문조사 실시계획의 건' 의결	위원회 제36차 회의
2011. 10. 21.	● 구체적 설문조사 계획 수립 ● 설문문항 초안 작성	운영지원단, 전문위원단
2011. 10. 25. ~ 10. 28.	● 설문조사 용역계약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운영지원단
2011. 10. 24. ~ 10. 31.	● 설문 문항 최종 수정 · 확정	운영지원단, 전문위원단
2011. 11. 4. ~ 11. 15.	● 예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주)코리아리서치
2011. 11. 17. ~ 12. 8.	● 본 설문조사 실시	
2011. 12. 9. ~ 12. 26.	● 설문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제출	
2011. 12. 27. ~ 2012. 1. 6.	● 설문결과 종합분석	운영지원단
2012. 1. 30.	●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	위원회 제39차 회의

II 설문조사 분석

1 강간과 살인에 대한 중대성 인식 차이

- ▶ 양형기준상 <사례 1>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 유형, <사례 2>는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유형에 해당하고, 각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9년 ~ 13년으로 동일함

【 사례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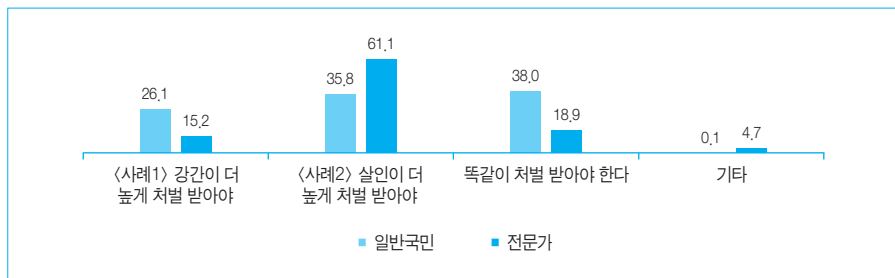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주위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여, 12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여, 10세)를 유인하려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 사례 2 】

피고인은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화끈에 칼로 피해자를 3회 찔러 살해하였다.

- ▶ 위 2가지 사례 중 어느 사안이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함

[Base : 전체(n=1,000), 단위 : %]



- ▶ 일반 국민의 경우, 최근 ‘도가니 사건’ 등을 통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살인범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전문가들의 경우, 살인범죄가 성범죄보다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로 조사되어 일반 국민과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임

2 성범죄와 관련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양형 인식

가. 성인 대상 강간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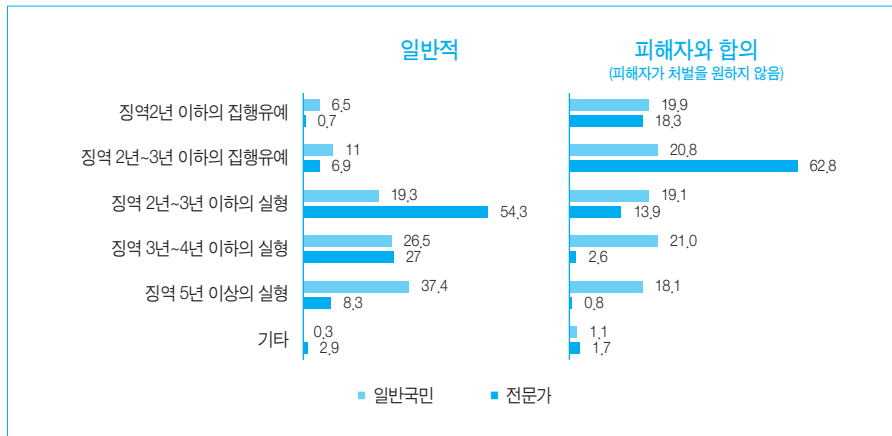
▶ 사안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에는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다.

▶ 설문조사 결과

(성인 대상 강간상해, 단위 : %)



▶ 분석 결과

- 평소 안면이 있는 성인간의 강간범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전문가들에 비하여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전문가들은 집행유예가 압도적으로 다수였으나, 일반 국민은 합의되더라도 여전히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60%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함

나. 친족관계 강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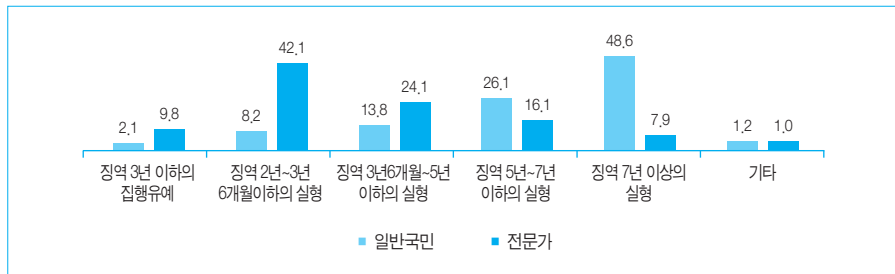
▶ 사안

피고인(40대)은 피해자(여, 15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다툰 후 일시적으로 집을 나가버려 잠시 피해자와 단둘이 살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몰래 수면제를 탄 오렌지 주스를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기운에 쓰러진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의붓딸을 1회 간음하였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친족관계 강간, 단위 : %)



▶ 분석 결과

- 일반 국민은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이 압도적으로 다수 의견인 데 비하여, 전문가들은 징역 2년 ~ 3년 6월 이하 실형이 다수 의견임
-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선고 형량에 대한 의견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친족관계 성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현저한 인식의 차이를 보임

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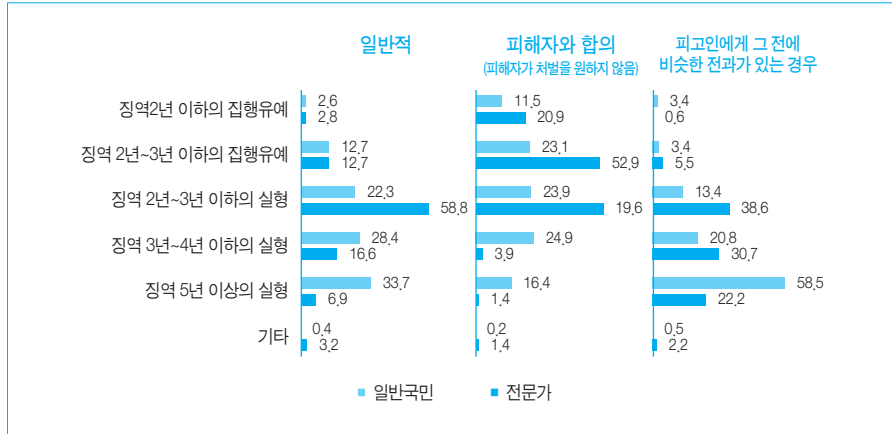
▶ 사안

피고인(30대 후반)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채팅 중 피해자(여, 12세)에게 또래 여자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등으로 자신을 또래 친구로 속인 후 연락처를 알아내 만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간 다음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고 나온 피해자에게 “친구 만나러 왔느냐, 타라”로 말하여 안심시킨 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무서워 반항을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비슷한 전과가 없다.

▶ 설문조사 결과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단위 : %)



▶ 분석 결과

- 일반 국민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비록 강제추행이더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보여 전문가들과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임
-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전문가들은 집행유예가 압도적으로 다수이나, 일반 국민은 합의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약 65%를 차지할 만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임

③ 성범죄 아닌 범죄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양형 인식

가. 살인

▶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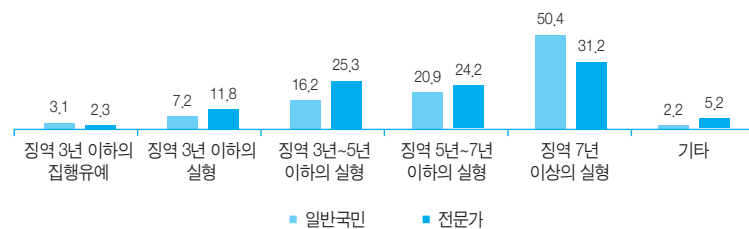
피고인(34세)은 고아로 양부모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사실로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결혼 후 생활고 등이 겹치면서 불화가 더욱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생후 8개월 된 피해자인 딸이 시끄럽게 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주거지 뒷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결혼 전 동거하던 남자와 사이에 태어난 생후 4개월 된 친딸을 사망하게

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친딸을 2차 레나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임신 중이고,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의 남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설문조사 결과

(살인죄, 단위 : %)



▶ 분석 결과

- 일반 국민 중 징역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에 비하여 다소 많은 점을 제외하고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별다른 인식의 차이를 찾기 어려움

나. 뇌물수수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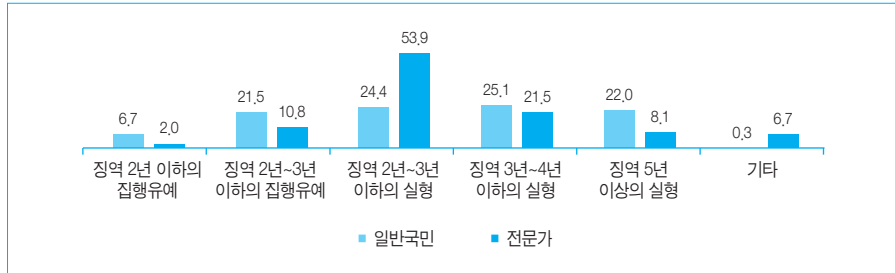
▶ 사안

피고인은 A경찰서 불법오픈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데, 관할 구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및 단속되었을 경우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15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은 1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전과만 있었다.

▶ 설문조사 결과

(뇌물수수, 단위 : %)



▶ 분석 결과

- 전문가들은 징역 2~3년 이하의 실형이 압도적 다수 의견인 데 비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 이상의 실형까지 다양한 의견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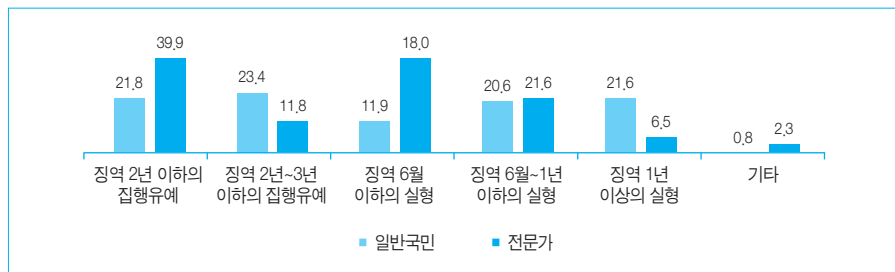
다. 위증

▶ 사안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A를 태우고 가던 중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로부터 부탁을 받고, 검사의 질문에 “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운전 중이 아니라 택시에서 내려서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어 버렸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 설문조사 결과

(위증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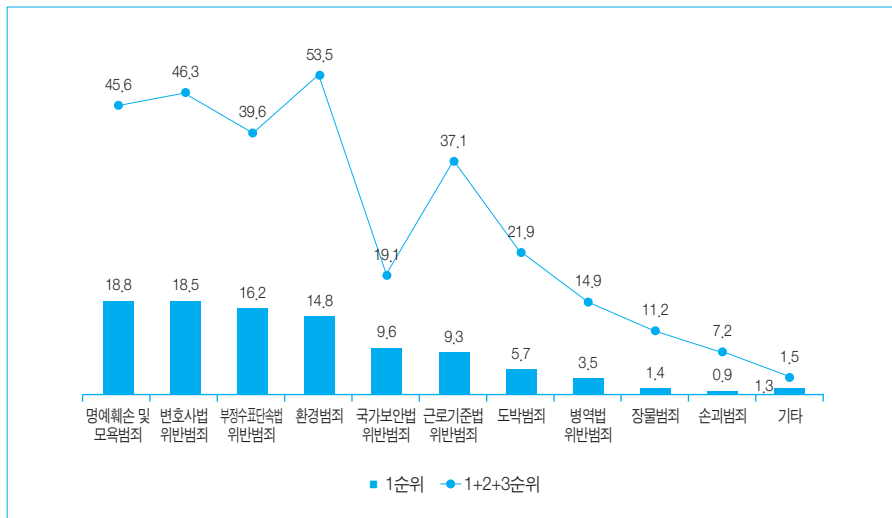


▶ 분석 결과

-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다소 많은 의견을 보인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별다른 인식의 차이가 없음

4 향후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한 범죄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 ▶ 3기 양형기준 설정 이후에 양형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범죄군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 최근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변호사법위반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환경범죄, 국가보안법위반범죄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제9장

전문위원 연구

I 2011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1 경과

2011. 1. 28. 전문위원 제36차 전체회의에서 2011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위 계획안은 2011. 2. 9. 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전문위원 연구계획은 구체적 양형기준안 설정을 목표로 하여 제3기 위원회 출범, 양형기준 시행, 전문위원 조직 정비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제2기 위원회 임기 내에는 제1기 양형기준의 수정 및 제2기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제3기 위원회 출범 이후로는 양형정책 수립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수행 및 양형기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3기 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선정 등 추가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 연구계획안 내용

주제별 연구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1) 연구 목적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수정안 최종 의결을 위하여 양형기준안 및 수정안의 수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연구 내용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및 제4차 공청회와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 41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회신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안 및 수정안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 다음, 양형기준안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형량범위 특별조정 등 변경사항의 반영,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정리,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수정 등 양형기준 매뉴얼을 수정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나.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1) 연구 목적

제3기 양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에 관하여 연구한다.

(2) 연구 내용

양형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및 제2차 임시회의에서 채택된 개별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 양형기준을 점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기 및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를 참고하여 제3기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결정하는 원칙 및 고려사항을 정한 뒤, 구체적인 대상범죄의 선정을 위한 연구를 한다.

다.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방법 연구

(1) 연구 목적

양형기준 수정 및 추가 양형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및 분석방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한다.

(2) 연구 내용

외국의 양형기준을 분석하고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을 연구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항목을 선정한 뒤, 우리나라의 양형기준 평가에 적합한 분석틀 및 분석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라. 집행유예 기준 개선방안 연구

(1) 연구 목적

현행 집행유예 기준의 평가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집행유예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2) 연구 내용

외국의 집행유예 관련 입법례 및 양형기준을 연구한 뒤 이를 참고하여 현행 집행유예 기준 적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집행유예 기준의 기본 틀 또는

참작사유 평가원칙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마. 제3기 양형기준안 연구

(1) 연구 목적

제3기 양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초안을 작성한다.

(2) 연구 내용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대한 현행 양형실무에 나타난 형종 및 형량 통계 등을 분석하여 과거 형량의 상향 여부를 고려하는 등의 양형실무를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일반양형인자 및 가중·감경인자로 하는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양형인자 선정, 대상범죄군별 집행유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수립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을 작성·수정하는 연구를 한다.

바. 양형기준 실제 적용사례 분석

(1) 연구 목적

양형기준의 실제 적용사례 분석을 통하여 양형인자 및 권고 형량범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이다.

(2) 연구 내용

현행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실시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형사 항소심의 역할 및 양형인자에 대한 공방 활성화 방법을 모색하여 적정한 양형인자 및 권고 형량범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한다.

③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요약

연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 장
1	제2기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종합적 검토	1월 ~ 3월	분담
2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4월 ~ 5월	2팀
3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방법 연구	4월 ~ 5월	분담

연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 장
4	집행유예 기준 개선방안 연구	6월 ~ 9월	1팀
5	제3기 양형기준안 연구	6월 ~ 12월	분담
6	양형기준 실제 적용사례 분석	6월 ~ 12월	분담



| 전문위원 제 47차 전체회의(2011. 12. 12.) |

II 전문위원 연구 성과

전문위원들은 확정된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라 팀별로 내부 회의를 거쳐 업무분장을 정한 후 연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가.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1) 연구개요

-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시기 및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에 관한 검토
- ▶ 담당 : 심재철, 정준화, 조석영 전문위원

(2) 내용

-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에 관한 검토
-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절차 및 대상에 관한 의견
- ▶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선정에 관한 의견(통계자료 포함)
- ▶ 공청회 및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안)
- ▶ 팀별 대상범죄군 분장안 관련 검토 의견

나. 제5, 6차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1) 연구개요**

- ▶ 주제 : 증권 ·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 담당 : 강우예, 김혜정, 심재철, 이진국, 정준화, 조석영, 홍준호 전문위원

(2) 내용

- ▶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 ▶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의견
- ▶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 ▶ 폭력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 자료
- ▶ 상해죄의 감경인자로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개념에 관한 검토
- ▶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 ▶ 지식재산권 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자료
- ▶ 증권 · 금융 범죄군 양형기준 기초자료
- ▶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 증권 · 금융 범죄군 유형 및 대상범위 검토

다.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안 검토**(1) 연구개요**

- ▶ 주제 : 증권 · 금융범죄 양형기준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 ▶ 담당 : 김혜정, 심재철, 정순섭, 정준화, 조석영 전문위원

(2) 내용

-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 증권·금융 범죄군 유형 및 대상범위 검토
- ▶ 증권·금융 범죄군 권고 형량범위 검토
-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의 형량범위 검토
- ▶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 ▶ 증권·금융범죄 양형인자 등 검토

라.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 주제 :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관한 검토 및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 담당 : 심재철, 안효길, 정준화, 조석영, 홍준호 전문위원

(2) 내용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
- ▶ 지식재산권 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 자료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
- ▶ 지식재산권 범죄군 대상 범죄 검토 요지
- ▶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형량범위 재검토
- ▶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형량범위 재검토

마.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1) 연구개요

- ▶ 주제 : 폭력범죄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 담당 : 강우예, 심재철, 조석영, 홍준호 전문위원

(2) 내용

- ▶ 폭력범죄 양형기준 검토
- ▶ 폭력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의견
- ▶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의 양형인자 검토
- ▶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바.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검토**(1) 연구개요**

- ▶ 주제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 담당 : 김혜정, 심재철, 정준화, 조석영, 최형표 전문위원

(2) 내용

- ▶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 교통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에 대한 의견
- ▶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준 검토 의견
-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 ▶ 교통범죄 양형인자 관련 쟁점 검토
-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회신 결과 검토
-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의 추가 검토

사. 선거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1) 연구개요**

- ▶ 주제 :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및 유형분류와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
- ▶ 담당 : 김혜정, 심재철, 조석영, 최진녕, 최형표, 함석천 전문위원

(2) 내용

-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
- ▶ 선거범죄 양형기준 제정 방향 검토

- ▶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대유형 및 소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관련 검토
- ▶ 선거범죄 양형인자 검토
- ▶ 선거범죄 양형기준 추가 검토
- ▶ 선거범죄 양형기준 검토에 대한 의견

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 연구개요

- ▶ 주제 :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 담당 : 김혜정, 심재철, 이수정, 정준화, 조석영 전문위원, 최동렬 수석전문위원

(2) 내용

- ▶ 성범죄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검토
- ▶ 공개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
-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안건 제출 여부
- ▶ 성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한 논의사항
- ▶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 ▶ 성범죄 양형기준 혁신 방안(권고 형량범위 산정 관련)
- ▶ 성범죄 관련 범죄유형 및 양형인자 수정 방안
- ▶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 기준 개선안
- ▶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의견
-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제안
- ▶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회신결과 검토
- ▶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기준 검토
- ▶ 전자장치 부착 기준안 검토 의견

제10장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업무 능력 배양

I 제3기 양형자료조사 현황

1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미확정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가. 개요

제3기 양형기준 설정 예상범죄의 양형자료 축적을 위하여 양형자료분석관은 2010. 11. 1.부터 법원에 계속되는 1심 선고사건의 양형자료조사 업무를 착수하였고, 2011. 5. 2. ~ 7. 22.까지 아래표와 같이 형사합의사건 총 143건, 형사단독사건 총 2,294건의 양형자료를 조사하였다.

나. 조사현황

구분	죄명	공갈	교특	도교	방화	상해	선거	손괴	장물	폭행	협박	전체
합의	5월	0	1	0	14	5	24	0	1	3	0	48
	6월	2	0	0	15	10	44	0	1	6	0	78
	7월	1	0	0	4	3	4	0	0	3	2	17
	소계	3	1	0	33	18	72	0	2	12	2	143
단독	5월	16	380	195	2	188	5	7	1	27	18	839
	6월	13	374	219	4	258	2	5	6	34	30	945
	7월	15	204	118	0	125	6	0	0	23	19	510
	소계	44	958	532	6	571	13	12	7	84	67	2,294
누계		47	959	532	39	589	85	12	9	96	69	2,437
비율(%)		1.9	39.4	21.8	1.6	24.2	3.5	0.5	0.4	3.9	2.8	100.0

2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확정 사건에 대한 추가 양형자료조사

가. 개요

양형위원회는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폭력(상해, 폭행, 협박),

교통, 금융·경제, 지식재산권, 방화, 공갈, 조세, 선거범죄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운영지원단에서는 양형기준 연구에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고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여 원할한 양형기준 설정에 기여하고자 양형자료분석관들이 40개 검찰청(지청포함)에 1차로 폭력(상해, 폭행, 협박), 교통, 금융·경제,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하여 2011. 8. 8. ~ 9. 9.까지 출장조사를 하였고, 2차로 방화, 공갈, 조세, 선거범죄에 대하여 2012. 2. 27. ~ 4. 13.까지 출장조사를 하였다. 아래표와 같이 1차 출장조사에서는 3,275건을 조사하였고, 2차 출장조사에서는 3,038건을 조사하였다.

나. 조사현황

(1) 1차 출장조사(2011. 8. 8. ~ 9. 9.)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폭력범죄	상해	22
	상해치사	202
	존속상해	99
	존속상해치사	25
	존속폭행	1
	중상해	165
	특수협박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상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흥기등 폭행)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14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흥기등 상해)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	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존속상해)	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 존속폭행)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존속협박)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폭행)	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협박)	64
	폭행	66
	폭행치사	198
	폭행치상	125
	협박	57
	계	1,835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50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7
	계	181
금융·경제 범죄	배임수재	126
	배임증재	113
	변호사법위반	54
	알선수재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7
	증권거래법위반	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49
	계	833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지식 재산권 범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2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43
	상표법위반	190
	저작권법위반	68
	계	426
총계		3,275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확정된 사건으로 한정

(2) 2차 출장조사(2012. 2. 27. ~ 4. 13.)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방화범죄	일반건조물방화	101
	일반물건방화	102
	일반자동차방화	81
	현주건조물등방화	175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16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100
	소계	575
공갈범죄	공갈	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공갈)	40
	소계	315
조세범죄	관세법위반 269조	162
	관세법위반 270조	106
	관세법위반 274조	4
	조세범처벌법위반 3조	298
	조세범처벌법위반 4조	0
	조세범처벌법위반 5조	0
	조세범처벌법위반 6조	21
	조세범처벌법위반 10조	301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조 1항	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조 2항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조 3항	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조 4항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8조	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8조의 2	13
	소계	988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230~234조)	463
	허위사실공표죄(250조)	60
	후보자비방죄(251조)	13
	선거운동기간위반(254조)	55
	부정선거운동죄(255조)	320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257조)	249
	소계	1,160
총계		3,038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선고·확정된 사건으로 한정

II 제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운영점검

1 개요

살인 등 제1기 양형기준 설정 7개 범죄군(2009.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및 약취·유인 등 제2기 양형기준 설정 8개 범죄군(2011.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운영지원단은 양형자료분석관을 통해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조사하였다.

2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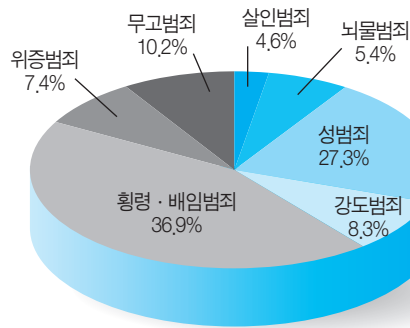
가. 월별 조사 현황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범죄군		월	2011년									2012년			전 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살인 범죄	수	61	68	69	66	58	78	68	79	73	48	68	36	772	
	비율	7.9	8.8	8.9	8.5	7.5	10.1	8.8	10.2	9.5	6.2	8.8	4.7	100.0	
뇌물 범죄	수	53	86	88	69	76	60	70	51	112	68	125	35	893	
	비율	5.9	9.6	9.9	7.7	8.5	6.7	7.8	5.7	12.5	7.6	14.0	3.9	100.0	
성범죄	수	385	295	354	356	301	473	358	396	427	392	519	283	4,539	
	비율	8.5	6.5	7.8	7.8	6.6	10.4	7.9	8.7	9.4	8.6	11.4	6.2	100.0	
강도 범죄	수	141	128	146	128	103	96	124	96	127	107	119	69	1,384	
	비율	10.2	9.2	10.5	9.2	7.4	6.9	9.0	6.9	9.2	7.7	8.6	5.0	100.0	
횡령· 배임범죄	수	501	542	655	485	581	555	523	552	388	471	702	192	6,147	
	비율	8.2	8.8	10.7	7.9	9.5	9.0	8.5	9.0	6.3	7.7	11.4	3.1	100.0	
위증 범죄	수	128	88	121	113	97	99	103	114	102	85	104	70	1,224	
	비율	10.5	7.2	9.9	9.2	7.9	8.1	8.4	9.3	8.3	6.9	8.5	5.7	100.0	
무고 범죄	수	170	136	165	145	148	180	130	145	129	129	146	69	1,692	
	비율	10.0	8.0	9.8	8.6	8.7	10.6	7.7	8.6	7.6	7.6	8.6	4.1	100.0	
전체	수	1,439	1,343	1,598	1,362	1,364	1,541	1,376	1,433	1,358	1,300	1,783	754	16,651	
	비율	8.6	8.1	9.6	8.2	8.2	9.3	8.3	8.6	8.2	7.8	10.7	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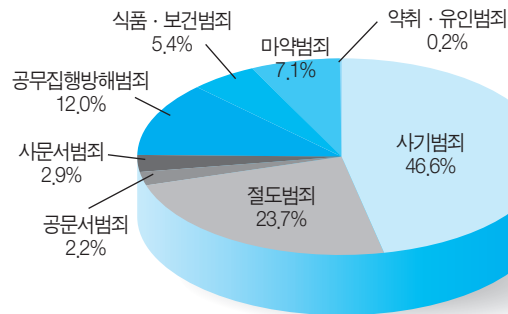
제 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비율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범죄군	월	2011년						2012년			전 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취·유인범죄	수	0	1	0	5	1	3	5	21	6	42
	비율	0,0	2,4	0,0	11,9	2,4	7,1	11,9	50,0	14,3	100,0
사기범죄	수	37	422	1,003	1,252	1,886	1,921	1,907	2,614	1,243	12,285
	비율	0,3	3,4	8,2	10,2	15,4	15,6	15,5	21,3	10,1	100,0
절도범죄	수	19	364	672	793	981	808	862	1,051	691	6,241
	비율	0,3	5,8	10,8	12,7	15,7	12,9	13,8	16,8	11,1	100,0
공문서범죄	수	2	25	58	65	95	40	107	106	71	569
	비율	0,4	4,4	10,2	11,4	16,7	7,0	18,8	18,6	12,5	100,0
사문서범죄	수	4	26	63	88	119	108	111	149	94	762
	비율	0,5	3,4	8,3	11,5	15,6	14,2	14,6	19,6	12,3	100,0
공무집행 방해범죄	수	13	163	359	422	488	493	417	487	320	3,162
	비율	0,4	5,2	11,4	13,3	15,4	15,6	13,2	15,4	10,1	100,0
식품·보건범죄	수	9	94	148	197	172	197	209	212	193	1,431
	비율	0,6	6,6	10,3	13,8	12,0	13,8	14,6	14,8	13,5	100,0
마약범죄	수	8	120	260	247	314	308	248	332	39	1,876
	비율	0,4	6,4	13,9	13,2	16,7	16,4	13,2	17,7	2,1	100,0
전체	수	92	1,215	2,563	3,069	4,056	3,878	3,866	4,972	2,657	26,368
	비율	0,3	4,6	9,7	11,6	15,4	14,7	14,7	18,9	10,1	100,0

제 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비율



나. 세부 죄명별 조사현황

해당기간(2011. 4. 1. ~ 2012. 3. 31.)에 조사된 제1기 및 제2기 양형기준 대상사건에 대한 세부 죄명의 월별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범 죄	세부죄명	2011년										2012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살 인 범 죄	강간살인	0	0	0	0	0	0	0	0	0	0	1	0	1	
	강도살인	0	0	0	1	2	1	1	1	2	1	4	0	13	
	강도살인미수	0	0	3	2	2	1	1	2	0	0	1	0	12	
	살인	26	30	17	26	18	25	26	27	22	15	27	13	272	
	살인미수	31	35	44	33	33	46	37	46	44	24	28	19	42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0	0	0	1	1	0	4	0	0	0	6	
	존속살해	2	2	4	3	1	4	2	3	1	7	3	2	34	
	존속살해미수	2	1	1	1	2	0	0	0	0	1	4	2	14	
	전체	61	68	69	66	58	78	68	79	73	48	68	36	772	
뇌 물 범 죄	뇌물공여	32	44	42	35	29	28	30	26	44	36	45	14	405	
	뇌물수수	9	17	28	21	28	20	26	15	37	15	61	11	288	
	부정처사후수뢰	3	1	2	0	3	5	0	1	2	0	0	1	18	
	수뢰후부정처사	0	1	1	3	0	0	0	1	4	0	3	0	13	
	제3자뇌물교부	0	3	2	2	3	2	1	0	4	3	2	0	22	
	제3자뇌물취득	1	4	3	5	4	1	2	0	6	5	4	1	36	
	특가법(뇌물)	8	16	10	3	9	4	11	8	15	9	10	8	111	
	전체	53	86	88	69	76	60	70	51	112	68	125	35	893	
성 범 죄	강간	8	8	17	12	9	10	11	17	9	14	19	12	146	
	강간살인	1	0	1	0	0	0	0	0	0	0	0	0	2	
	강간상해	16	15	20	16	10	20	15	13	17	8	18	11	179	
	강간치사	0	0	0	0	0	0	0	0	0	0	0	1	1	
	강간치상	23	20	20	25	19	25	25	17	28	8	24	8	242	
	강도강간	0	3	1	0	1	1	0	1	1	0	2	0	10	
	강제추행	57	46	51	48	44	59	53	73	68	83	96	73	751	
	강제추행상해	9	3	2	5	3	3	2	9	2	3	4	3	48	

범 죄	세부죄명	2011년										2012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강제추행치상	13	12	8	9	8	13	11	11	8	6	14	6	119	
	미성년자의제강간	0	0	1	2	2	0	1	2	1	1	0	0	10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0	0	0	0	1	0	0	0	0	2	0	1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0	4	1	0	3	1	0	3	2	1	0	16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0	1	0	0	0	0	0	0	0	0	0	0	1	
	성폭력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5	5	10	9	3	6	1	12	8	4	4	2	79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0	0	0	0	0	0	0	0	0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4	6	1	0	1	0	0	0	0	3	0	0	15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	0	0	0	0	1	0	0	0	0	0	0	2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0	0	0	0	0	0	0	0	1	0	0	0	1	
	성폭력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	3	5	1	3	0	1	0	9	1	1	3	29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1	1	0	0	0	0	1	0	0	1	2	0	6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6	2	1	2	2	2	5	2	3	0	2	3	30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2	0	2	3	0	0	0	0	1	2	0	0	10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	3	0	3	3	2	0	1	1	1	2	0	19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0	0	1	0	0	0	0	0	0	1	2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1	0	1	0	0	0	0	0	0	1	0	8	
	성폭력범죄(특수강간)	2	0	1	4	4	10	0	10	3	5	2	1	42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	1	8	5	3	6	6	1	0	1	0	2	36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	0	0	2	0	0	0	0	0	0	0	0	3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	1	1	0	5	0	0	1	2	0	0	0	11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7	20	23	21	28	42	26	21	35	27	48	16	334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0	0	0	0	0	0	0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14	9	8	9	6	15	10	9	11	7	13	1	112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범 죄	세부죄명	2011년										2012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6	6	5	3	7	22	10	20	12	18	11	1	121	
	성폭력범죄특례법 (미성년자강간등)	0	0	0	0	1	0	0	0	0	0	0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0	0	0	0	0	0	0	0	0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강제추행)	0	0	0	0	0	0	0	0	0	0	0	2	2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6	10	14	6	6	16	12	6	10	14	16	7	123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1	0	1	5	0	1	0	0	3	1	2	1	15	
	성폭력범죄특례법 (주거침입강간등)	21	18	17	18	17	39	21	25	26	15	14	15	246	
	성폭력범죄특례법 (주거침입강제추행)	0	0	0	0	0	0	2	0	0	0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강간)	4	5	3	3	5	5	8	7	4	7	9	3	63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0	5	7	4	5	5	7	5	4	1	7	3	63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2	2	0	0	0	0	1	1	1	0	7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2	1	0	2	0	0	3	1	2	1	1	1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20	8	17	26	16	41	19	20	22	25	25	12	251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강도강간등)	9	9	14	12	10	13	12	2	15	10	12	9	127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강제추행)	1	3	4	3	5	6	1	4	0	8	2	7	4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3	3	2	8	3	2	7	7	5	18	7	3	68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준강제추행)	0	3	0	0	0	0	0	2	0	0	0	0	5	
	아동·청소년보호(강간등)	73	51	70	73	55	91	81	80	91	77	135	53	930	
	준강간	3	2	3	7	2	4	2	6	10	6	5	5	55	
	준강간치상	1	1	1	0	1	2	1	0	2	1	1	2	13	
	준강제추행	10	8	6	8	8	8	6	8	10	8	16	12	108	

범 죄	세부죄명	2011년										2012년			전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준강제추행상해	0	0	0	0	0	0	0	0	0	0	0	1	1	
	준강제추행치사	0	0	0	0	1	0	0	0	0	0	0	0	1	
	준강제추행치상	0	0	1	0	1	0	0	1	0	1	1	0	5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0	1	0	0	0	0	0	0	0	0	0	0	1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0	0	1	0	0	0	0	0	0	0	0	0	1	
	전체	385	295	354	356	301	473	358	396	427	392	519	283	4,539	
강 도 범 죄	강도	21	12	14	9	6	15	14	7	14	13	11	11	147	
	강도살인	1	3	1	3	1	4	0	0	0	0	0	0	13	
	강도상해	44	46	59	44	54	36	48	34	61	40	46	24	536	
	강도치사	0	1	0	2	0	2	0	1	0	0	0	1	7	
	강도치상	2	2	4	4	8	6	7	1	6	3	3	1	47	
	준강도	10	12	8	11	5	9	6	11	4	3	7	5	91	
	준특수강도	0	2	0	2	0	1	2	1	0	0	0	0	8	
	특가법(강도)	0	5	0	1	0	1	1	0	1	1	0	0	10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0	2	3	3	1	1	1	0	1	0	1	1	14	
	특수강도	63	43	57	49	28	21	45	41	40	47	51	26	511	
	전체	141	128	146	128	103	96	124	96	127	107	119	69	1,384	
횡 령 · 배 임 범 죄	배임	33	32	56	36	44	31	34	38	28	44	42	16	434	
	업무상배임	43	37	49	42	66	40	25	36	22	45	51	16	472	
	업무상횡령	199	215	249	167	230	231	194	195	163	175	253	78	2,349	
	특경가법(배임)	12	23	33	26	15	35	16	36	13	24	86	3	322	
	특경가법(횡령)	27	34	53	46	45	45	55	44	34	38	89	9	519	
	횡령	187	201	215	168	181	173	199	203	128	145	181	70	2,051	
	전체	501	542	655	485	581	555	523	552	388	471	702	192	6,147	
위 증 범 죄	모해위증	2	1	2	1	1	0	3	4	0	0	1	4	19	
	위증	99	73	100	99	84	88	83	93	92	77	89	63	1,040	
	위증교사	27	14	19	13	12	11	17	17	10	8	14	3	165	
	전체	128	88	121	113	97	99	103	114	102	85	104	70	1,224	
무 고 범 죄	무고	170	136	165	145	148	177	130	143	129	129	145	69	1,686	
	특가법(무고)	0	0	0	0	0	3	0	2	0	0	1	0	6	
	전체	170	136	165	145	148	180	130	145	129	129	146	69	1,692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범 죄	세부죄명	2011년						2012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약 취 · 유 인 범 죄	미성년자약취	0	0	0	0	0	0	3	3	1	7
	미성년자유인	0	0	0	0	0	2	1	0	4	7
	특가법(약취.유인)	0	0	0	2	0	0	1	1	0	4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0	1	0	3	1	1	0	17	1	24
	전체	0	1	0	5	1	3	5	21	6	42
사 기 범 죄	사기	37	406	979	1,217	1,831	1,814	1,813	2,500	1,201	11,798
	상습사기	0	5	6	2	15	8	11	10	9	66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0	0	0	0	0	0	1	0	0	1
	준사기	0	1	0	0	0	3	5	0	0	9
	컴퓨터등사용사기	0	3	10	12	23	26	28	14	16	132
	특경가법(사기)	0	7	8	21	17	70	49	90	17	279
	전체	37	422	1,003	1,252	1,886	1,921	1,907	2,614	1,243	12,285
절 도 범 죄	문화재보호법위반	0	0	0	0	3	1	0	5	0	9
	산림보호법위반	0	0	0	0	4	2	3	0	1	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0	0	0	0	17	11	11	12	11	62
	상습절도	0	0	0	1	3	5	2	0	1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0	11	16	44	42	30	42	45	37	267
	야간방실침입절도	0	4	1	4	3	5	2	3	4	26
	야간선박침입절도	0	0	0	0	0	0	1	0	0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13	22	29	34	29	31	37	28	224
	절도	13	184	348	383	448	366	402	475	339	2,958
	특가법(산림)	0	0	0	0	2	8	0	4	0	14
	특가법(상습절도)	0	0	0	0	0	0	0	2	0	2
	특가법(절도)	5	73	123	133	189	166	147	182	114	1,132
	특수절도	0	79	162	199	236	185	221	286	156	1,524
	전체	19	364	672	793	981	808	862	1,051	691	6,241
	공기호부정사용	0	0	0	0	0	0	0	2	0	2
	공문서변조	0	1	2	2	7	4	9	4	4	33
	공문서부정행사	0	9	10	10	24	3	14	23	20	113

범 죄	세부죄명	2011년						2012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공 문 서 범 죄	공문서위조	0	7	8	17	22	9	25	25	9	12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7	27	19	32	14	42	39	28	209
	공전자기록등위작	0	0	2	0	0	1	0	0	0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1	6	7	2	5	11	9	7	49
	변조공문서행사	0	0	0	0	1	1	0	1	0	3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0	0	0	0	0	0	1	0	0	1
	위조공문서행사	0	0	1	2	0	2	1	2	2	10
	허위공문서작성	0	0	2	8	7	1	4	1	1	24
	전체	2	25	58	65	95	40	107	106	71	569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0	0	0	0	1	0	1	0	0	2
	사문서변조	0	1	3	3	4	1	7	3	2	24
	사문서부정행사	0	0	0	0	1	2	0	0	0	3
	사문서위조	3	16	50	84	106	92	99	136	85	671
	사문서위조행사	0	0	1	0	0	0	0	0	0	1
	사전자기기록등위작	0	1	4	0	3	4	0	1	0	13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0	1	0	0	0	0	0	0	0	1
	위조사문서행사	1	5	3	0	2	4	2	4	4	25
	위조사서명행사	0	0	0	0	0	0	2	0	0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0	2	2	0	2	2	0	4	3	15
	허위진단서작성	0	0	0	1	0	3	0	1	0	5
	전체	4	26	63	88	119	108	111	149	94	762
공 무 집 행 방 해 범 죄	공무집행방해	10	115	284	350	390	381	316	395	255	2,496
	공용건조물파괴	0	0	0	0	0	2	0	0	0	2
	공용물건무효	0	0	1	0	0	0	0	0	0	1
	공용물건손상	2	24	30	31	59	55	54	38	39	332
	공용물건은닉	0	0	0	1	0	0	0	0	0	1
	공용서류무효	0	0	0	1	0	1	3	2	0	7
	공용서류손상	0	0	3	5	4	4	5	7	0	28
	공용서류은닉	0	0	0	2	0	1	0	0	0	3
	공용전자기록등손상	0	0	0	0	0	0	1	0	0	1
	위계공무집행방해	0	2	8	7	5	14	16	11	11	74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범 죄	세부죄명	2011년						2012년			전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특수공무집행방해	1	17	21	14	20	15	13	16	8	125
	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	0	3	11	9	10	20	8	17	6	84
	특수공용물건손상	0	2	1	2	0	0	1	1	1	8
	전체	13	163	359	422	488	493	417	487	320	3,162
식 품 · 보 건 범 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0	4	4	0	3	4	1	7	5	2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0	1	0	5	0	0	0	0	6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2	15	33	42	50	29	22	33	28	2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0	4	12	19	25	20	19	21	15	135
	식품위생법위반	6	40	55	69	27	80	99	74	93	543
	약사법위반	0	13	16	15	21	12	21	22	17	137
	의료법위반	1	17	25	47	35	46	42	46	28	287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0	0	0	1	1	0	0	0	0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0	0	0	3	5	2	5	6	6	27
	화장품법위반	0	1	2	1	0	4	0	3	1	12
	전체	9	94	148	197	172	197	209	212	193	1,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1	8	52	26	44	31	25	41	1	229
마 약 범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	0	5	3	9	3	3	2	2	0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7	85	183	192	235	238	204	264	15	1,4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0	22	22	20	32	36	17	25	19	193
	특가법(향정)	0	0	0	0	0	0	0	0	4	4
	전체	8	120	260	247	314	308	248	332	39	1,876

다. 법원별 조사현황

해당기간(2011. 4. 1. ~ 2012. 3. 31.)에 조사된 제1기 및 제2기 양형기준 대상사건에 대한 세부 죄명의 월별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제1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제1기 대상범죄							전 체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서울중앙	수	41	162	291	78	726	67	121	1,486
	비율	2.8	10.9	19.6	5.2	48.9	4.5	8.1	100.0
서울동부	수	24	15	171	40	245	32	81	608
	비율	1.6	1.0	11.5	2.7	16.5	2.2	5.5	100.0
서울남부	수	28	34	190	74	268	45	49	688
	비율	1.9	2.3	12.8	5.0	18.0	3.0	3.3	100.0
서울북부	수	30	8	232	58	191	28	88	635
	비율	2.0	0.5	15.6	3.9	12.9	1.9	5.9	100.0
서울서부	수	23	28	143	29	173	15	42	453
	비율	1.5	1.9	9.6	2.0	11.6	1.0	2.8	100.0
의정부	수	41	15	272	64	391	67	94	944
	비율	2.8	1.0	18.3	4.3	26.3	4.5	6.3	100.0
인천	수	59	92	419	108	571	147	149	1,545
	비율	4.0	6.2	28.2	7.3	38.4	9.9	10.0	100.0
수원	수	123	87	532	213	817	123	153	2,048
	비율	8.3	5.9	35.8	14.3	55.0	8.3	10.3	100.0
춘천	수	28	20	141	40	157	62	56	504
	비율	1.9	1.3	9.5	2.7	10.6	4.2	3.8	100.0
대전	수	63	55	326	114	393	82	119	1,152
	비율	4.2	3.7	21.9	7.7	26.4	5.5	8.0	100.0
청주	수	27	13	168	31	165	28	50	482
	비율	1.8	0.9	11.3	2.1	11.1	1.9	3.4	100.0
대구	수	73	90	444	163	521	120	172	1,583
	비율	4.9	6.1	29.9	11.0	35.1	8.1	11.6	100.0
부산	수	59	88	314	109	445	101	170	1,286
	비율	4.0	5.9	21.1	7.3	29.9	6.8	11.4	100.0
울산	수	18	15	108	37	150	49	27	404
	비율	1.2	1.0	7.3	2.5	10.1	3.3	1.8	100.0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제1기 대상범죄							전 체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 배임범죄	위증범죄	무고범죄	
창원	수	46	54	246	78	287	75	85	871
	비율	3.1	3.6	16.6	5.2	19.3	5.0	5.7	100.0
광주	수	49	81	305	100	389	95	113	1,132
	비율	3.3	5.5	20.5	6.7	26.2	6.4	7.6	100.0
전주	수	32	31	178	38	179	68	94	620
	비율	2.2	2.1	12.0	2.6	12.0	4.6	6.3	100.0
제주	수	8	5	59	10	79	20	29	210
	비율	0.5	0.3	4.0	0.7	5.3	1.3	2.0	100.0
전체	수	772	893	4,539	1,384	6,147	1,224	1,692	16,651
	비율	52.0	60.1	305.5	93.1	413.7	82.4	113.9	100.0

(2)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제2기 대상범죄								전체
		약취· 유인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식품· 보건범죄	마약범죄	
서울중앙	수	4	1,111	464	60	80	233	202	188	2,342
	비율	0.2	47.4	19.8	2.6	3.4	9.9	8.6	8.0	100.0
서울동부	수	4	521	234	18	20	109	41	53	1,000
	비율	0.4	52.1	23.4	1.8	2.0	10.9	4.1	5.3	100.0
서울남부	수	0	570	311	13	50	204	90	65	1,303
	비율	0.0	43.7	23.9	1.0	3.8	15.7	6.9	5.0	100.0
서울북부	수	0	482	222	18	27	170	49	56	1,024
	비율	0.0	47.1	21.7	1.8	2.6	16.6	4.8	5.5	100.0
서울서부	수	12	348	161	12	27	96	47	65	768
	비율	1.6	45.3	21.0	1.6	3.5	12.5	6.1	8.5	100.0
의정부	수	1	662	235	26	35	127	58	135	1,279
	비율	0.1	51.8	18.4	2.0	2.7	9.9	4.5	10.6	100.0
인천	수	1	1,006	573	69	69	281	101	208	2,308
	비율	0.0	43.6	24.8	3.0	3.0	12.2	4.4	9.0	100.0

		제2기 대상범죄								전체
		약취· 유인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 범죄	사문서 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식품· 보건범죄	마약범죄	
수원	수	4	1,619	782	78	94	401	137	278	3,393
	비율	0.1	47.7	23.0	2.3	2.8	11.8	4.0	8.2	100.0
춘천	수	0	307	171	57	18	96	52	75	776
	비율	0.0	39.6	22.0	7.3	2.3	12.4	6.7	9.7	100.0
대전	수	3	714	476	37	37	167	74	64	1,572
	비율	0.2	45.4	30.3	2.4	2.4	10.6	4.7	4.1	100.0
청주	수	1	344	256	4	23	87	28	40	783
	비율	0.1	43.9	32.7	0.5	2.9	11.1	3.6	5.1	100.0
대구	수	3	1,247	572	43	71	340	122	127	2,525
	비율	0.1	49.4	22.7	1.7	2.8	13.5	4.8	5.0	100.0
부산	수	4	1,201	568	37	71	256	186	273	2,596
	비율	0.2	46.3	21.9	1.4	2.7	9.9	7.2	10.5	100.0
울산	수	2	232	144	17	19	77	12	40	543
	비율	0.4	42.7	26.5	3.1	3.5	14.2	2.2	7.4	100.0
창원	수	1	585	361	19	32	173	76	113	1,360
	비율	0.1	43.0	26.5	1.4	2.4	12.7	5.6	8.3	100.0
광주	수	2	833	428	47	51	184	97	44	1,686
	비율	0.1	49.4	25.4	2.8	3.0	10.9	5.8	2.6	100.0
전주	수	0	320	197	10	19	84	43	35	708
	비율	0.0	45.2	27.8	1.4	2.7	11.9	6.1	4.9	100.0
제주	수	0	183	86	4	19	77	16	17	402
	비율	0.0	45.5	21.4	1.0	4.7	19.2	4.0	4.2	100.0
전체	수	42	12,285	6,241	569	762	3,162	1,431	1,876	26,368
	비율	0.2	46.6	23.7	2.2	2.9	12.0	5.4	7.1	100.0

III 분석업무 능력 배양

1 개요

운영지원단에 소속된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형자료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지원단 본부 및 전국 13개 법원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양형자료분석관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증진하는 한편, 양형자료조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관 워크숍 및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규 전입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주제발표와 의견 교환, 자유토론을 통해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 점검 업무의 효율성·통일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분석관 워크숍은 분석관들로 하여금 분석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은 물론, 양형자료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분석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 실시 내역

(1) 일시·장소

- ▶ 일 시 : 2011. 10. 14. ~ 10. 15.
- ▶ 장 소 : 용인 한화리조트

(2) 참석

- ▶ 운영지원단장
- ▶ 기획운영과장
- ▶ 양형자료분석관(15명)
- ▶ 양형자료조사과 직원(과장 포함 2명)
- ▶ 통계분석과 직원(통계실무관 1명)

(3) 주제 발표

주 제	발 표 자
운영점검에 관한 분석관 역할	황재명
운영점검시 기본범죄 결정의 실무연구	엄홍준
운영점검 및 신양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실무연구	박영민
운영점검 충실화 방향	박대영
양형기준 마련에서의 양형조사와 통계분석의 역할 및 양형조사 적용방안	선창민

3 양형자료분석관 정기 토론회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나. 실시 내역

(1) 일시 · 장소

- ▶ 1차 토론회
 - 일시 : 2011. 6. 23.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 2차 토론회
 - 일시 : 2011. 12. 15.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 3차 토론회
 - 일시 : 2012. 4. 26.
 - 장소 :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

(2) 참석 대상

- ▶ 양형자료분석관(15명)
- ▶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행정관

(3) 토론 내용

- ▶ 양형자료분석관 분장사무 조정 방안

- 제2기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분석관 분장사무의 조정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
- ▶ 양형자료조사표 작성방법 및 수정안 검토
 -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양형자료조사표 점검, 작성방법 및 양형자료 분석업무 전산시스템 입력사항 점검 후 질의응답
- ▶ 양형기준 운영점검 통일방안
 - 양형기준 운영점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수행 통일방안 모색
- ▶ 확정사건 양형자료 출장조사 개선방안
 - 확정사건 양형자료 출장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

4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신규 분석관 및 직원들로 하여금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실시 내역

(1) 일시 · 장소

- ▶ 일시 : 2012. 1. 11. ~ 1. 13.
- ▶ 장소 : 법원공무원교육원 211호 강의실 및 315호 멀티전산실

(2) 교육대상

- ▶ 신규 전입 양형자료분석관(7명)
- ▶ 운영지원단 자료조사과 및 통계분석과의 분석관 및 직원(이상 8명)

(3) 교육내용

- ▶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업무 계획
-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방법
 - 양형자료조사의 의미 및 필요성

-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 양형자료조사표의 작성 및 신양형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실습
-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개요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표 작성 실습